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2
----------	------

발의연월일 : 2024. 8. 20.

발 의 자 : 김용민 · 한준호 · 문정복  
전재수 · 모경중 · 주철현  
문진석 · 민형배 · 김 현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꿈수 도주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탄핵제도는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비위를 범할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

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 중 “발의된”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고, 발의된”으로,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후단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제131조제1항 중 “제130조제1항의”를 “제130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를 “정지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핵소추안 송부 및 사직원 접수와 해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u>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u>&lt;후단 신설&gt;</u></p> <p>② 본회의가 <u>제1항에</u>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  <u>&lt;신설&gt;</u></p>	<p>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          -----          -----<u>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고, 발의된</u>-----          -----<u>보고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 후단에</u>-----          -----          -----          -----          -----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 전단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u></p>

<p>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u>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u>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생략)</p> <p>② <u>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u></p>	<p><u>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u></p> <p>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u>제130조제1항 후단의</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정지된다.</u></p>
--	--